

## [ 오피니언 ]

## 월/요/광/장

정찬용



파리, 밀라노, 바로셀로나, 브뤼셀, 리스본, 오사카. 엑스포를 개최한 공통점에 대한 관광객, 사업가, 공무원,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넘쳐나는 국제도시들이다. 일자리가 많고 돈도 넘어야 풀기도 한다. 2012년 엑스포 개최 이후 여수도 과연 이런 도시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을까?

흔히 성공적인 개최를 이야기한다. 도로를 내고 멋진 호텔 짓고 관광객을 쿠루즈터미널도 만든다. 독특한 랜드마크를 만들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이루어낸다. 다 좋은 얘기다. 당연히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만 하면 과연 2012년 이후, 단지 엑스포 개최되었고 박물관과 수족관을 볼 수 있고 놀이공원이 있다고 해서 북경의 초등학생, 일본의 중학생들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 작고 아름다운 항구 여수로 물려갈 수 있을까? 상해, 도쿄, 서울을 놔두고 각종 국제회의와 세미나의 개최지로서 이 도시를 떠올릴까? 이 문제야말로 민·관·산·학·연·정(民·官·產·學·言·政)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할 일이다.

큰 방향은 여수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우선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영남 그리고 이웃나라 중국, 일본 분들을 모셔야 한다. 그러면 세계의 사람과 기업이 물려온다. 엑스포를 단순한 일회성 국제행사가 아니라 사람과 기업,

획을 그었던 1972년 스포츠선언, 1982년 나이로비 선언, 1992년 리우 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에 이어 2012년 여수 선언은 인류를 환경재앙에서 탈출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아직 정착되지 않은 기후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NGO기구 등을 유치하는 일이다. 이웃 나라들이 눈뜨기 전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 UN 사무총장도 도울 것이다. 사무실을 지어 무상으로 빌려주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놀라 앉는다. 놀라 앉은 외국인들은 수많은 외국인들을 불러들인다. 우선 아래

## 2012 여수엑스포와 그 이후

국제회의와 세미나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행히 여수는 참으로 행운을 타고난 도시다. 국제도시로 빌려줄 수 있는 안팎의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먼저 '바다와 연안'이라는 주제가 바깥 사회의 흐름과 잘 어울린다. 국제사회 논란의 촉이 전쟁과 가난, 갈등의 문제에서 기후문제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대지진, 동남아 쓰나미 등 재앙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여수엑스포는 세계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국제환경문제에 큰

(亞太) 사무소부터라도 하나씩 둘씩 차근 차근 유치해 나가야 한다.

여수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도시다. 주변의 크고 작은 다도해와 섬 속의들과 산, 마을 및 해수욕장, 순천만 늪지, 낙안읍성 등은 세계의 관광객들이 감탄하는 곳이다. 멀리는 큰 바다, 가까이는 오동도를 굽어볼 수 있는 덕진동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현우 별장을 지어 분양하는 것은 어쩔까. 그림에 관심 많은 유럽인들, 낮은 음식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에게 예향(藝鄉), 미향(味鄉)을 자랑하자. 큐전 한

정식, 상하이 및 베이징 요리, 이탈리아 요리를 준비하자. 음식점 메뉴판, 교통표지판, 관광지 안내문을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고치자.

인구 30만의 여수, 작다고 수줍어할 것은 없다. 200여개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는 제네바도 스위스의 수도가 아니고 작은 공항 하나에 인구 30만 수준의 도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라는 강국에 둘러쌓여 있는 것도 중국, 일본, 러시아 삼각축에 있는 우리와 닮았다. 국제도시는 대부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강소국의 작은 도시들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교하면 여수는 여유만만이다.

여수를 아시아의 제네바로 만들자. 제네바에 상주하는 15만명의 외국인이 1년에 수백만명의 외국인을 제네바로 불러모운다. 이들이 회의 끝나고 1~2시간 거리의 몽블랑이나 응프리우에 가고 3시간 거리의 쥐리히, 밀라노도 둘러 봄다.

여수에 오는 사람들이 강진과 목포, 광주를 가고 부산, 경주, 서울도 구경하는 거다. 그래서 엑스포는 여수만이 아닌 전라도의 엑스포, 한반도의 엑스포다. 여수가 꿈을 제대로 꾸면 광주와 전남, 대전민국의 꿈은 절로 이루어진다.

〈현대·기아자동차 인재개발원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칼럼

오영표



미국산 수입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정주부에서 초등학생·대학생·자영업자·직장인·농민·교사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층들이 촛불을 켜들고 한목소리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은 인간이 초식 동물인 소에게 동물사료를 함부로 먹인 무지와 오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광우병은 자연 생리학을 무시하고 소에 소를 먹인 인간에 대한 천형(天刑)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헬트-야코프병 vCJD)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은 국민이 통치자에게 통치권을 부여한 것이기에 통치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수령해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권력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통치권도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가 우리 헌법 제1조를 애써 외치는 이유다.

국민은 통치자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재협상을하기를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 달이 넘도록 거리를 매워온 수많은 국민의 우선 바람은 미국과 수입 쇠고기에 관해 전면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 기고

김종선



요즘 농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나 생활에서 환경을 빼고서는 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은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의 책임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지역의 환경감시활동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미지수이다. 사실 상수원을 제대로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 특히 상수원 근처에 주거지나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약 사용이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상수원을 보호하면서 막무가내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무조건 출입을 통제만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보

조로 다시 태어나고 누에그라로 활짝 꽂을 괴우면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농업인의 소득작목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디산업이 크게 부상하면서 뽕밭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왕 늘어나는 뽕밭을 아무 곳에나 조성하지 말고 환경보호의 파수꾼으로 이용하는 하자는 것이다. 누에를 우리들의 식수원을 지키는 조병으로 이용하는 미지수이다. 사실 상수원을 제대로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 특히 상수원 근처에 주거지나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약 사용이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상수원을 보호하면서 막무가내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무조건

출입을 통제만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보

지금까지는 누에만 먹어오던 깨끗한

## 환경지킴이 바이오 양잠산업

면 합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상수원 관리 수단이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상수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즉 누에를 길러 환경의 파수꾼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누에는 농약을 비롯한 화학약품에 매우 민감한 곤충이다. 어찌면 첨단의 과학 장비보다도 더욱 예민하게 불량한 환경에 반응하기도 한다.

국회 역시 수입 쇠고기 재협상 결의안을 제작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고,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야 할 것이다.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잊을 6월의 하늘은 말하고 있지 않은가. 어두운 밤을 밝혀온 촛불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회와 미래를 밝히는 그것으로 의미롭게 남기를 바라는 마음은 비단 필자만의 마음은 아닐 것이다.

〈변호사〉

뽕잎을 인류의 건강을 위한 기능성 건강식품소재로 활용하여 성인들의 제한 받는 식단으로부터 해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뽕잎아이스크림, 뽕잎냉면, 국수, 뽕잎 자연장, 호두과자 등 여러 식품의 첨가용 재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청정지역에 어울리는 오디나무이다. 오디는 어릴적 동심을 자아내는 추억의 열매이다. 최근에는 오디만을 생산하는 전용 뽕잎나무가 육성되어 알도 굽고 달기도 하며 매우 인기가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오디끼이 어우러진 상수원지역은 좋은 테마농촌인 '누에마을'로 육성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상수원지역에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농작물을 대신하여 뽕잎나무를 심고 양잠으로 대체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여긴다. 꿩먹고 알먹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전남도 농산물원종장 분장장〉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전 국민이 촛불집회로 일어선 것은 광우병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들이 우리의 소박한 밥상,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과 광범위한 공감대에 있다.

수입 쇠고기 협상의 그늘 한켠에는 우리 한우를 기르는 농민들의 깊은 한숨과 생계문제도 방치되어 있다. 국민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공감하며, 자녀와 혹은 친구들과 혹은 제자들과 함께 광장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되는 노래는 어느덧 촛불집회의 애창곡이 되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권이 무엇인지에 관한 거창하고 세세한 논의를 떠나,

민심은 천심이다. 쇠고기 수입조건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유연하게 재협상을 나설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국민의 의사를 따름으로써 오히려 통치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버립으로써 국민의 혁명함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을 배워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수입 쇠고기 재협상 결의안을 제작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고,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야 할 것이다. 권리와는 총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잊을 6월의 하늘은 말하고 있지 않은가. 어두운 밤을 밝혀온 촛불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회와 미래를 밝히는 그것으로 의미롭게 남기를 바라는 마음은 비단 필자만의 마음은 아닐 것이다.

## 음식점 등 고객 중심 친절경영 관광객 부른다

기도 했다. 하물며 음식이 짜거나 맵거나 싱거울 경우 문제점은 지적하면 대부분 손님의 입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덮어 써웠다.

고객들의 입맛은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친절하게 고객 중심으로 영업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광주를 찾는 관광객은 감동해 또다시 광주를 찾아올 것이다.

▲주연실·광주시 동구 산수1동

## 분재용 소나무 불법 채취… 보호 법규 정비 시급

등산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다. 하지만 산행을 하다 보면 소나무 숲에 구렁이도 보이고 소나무를 파다가 뿌리가 끊어지거나 내버린 흔적도 자주 본다. 또 주택가를 지나다 보면 어떤 집 마당에 수십 그루의 소나무 분자를 목격하기도 한다.

분재의 아름다움보다는 문제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소나무를 불법으로 채취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소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모양의 소나무를 관상하는 데 만족하면 어떨까.

소나무를 분재로부터 보호하는 조례 제정

이나 관련법 정비 등이 시급하다. 산에서 채취시에 적발될 때에는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리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 규정을 강화해 소나무 등 자연훼손을 막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단속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생명과 같은 귀중한 소나무를 스스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모양의 소나무를 관상하는 데 만족하면 어떨까.

▲전연희·광주시 동구 총장2호

## 시설

## 정부, 실효성 있는 '미분양 대책' 내놓아야

정부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주택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확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주택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방경제의 발복을 잡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묘안이 나올지 관심이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까지 서민 생계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주택경기 활성화 없이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전면해제, 민간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정부 대책이 시기로 놓친 치부로는 물론 그만한 지방 경기는 심각하다. 따라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미분양 대책에는 지방의 거래세와 양도세 적용을 수도권과 차별화하는 등 과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지방주택 건설 현장에 풀어놓기로 해야 한다.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에다 취업난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다. 지방경제와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 靑-내각 일괄 사의… 획기적 인적쇄신을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이 임박했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 장관들이 지난 6일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키로 했다. 청와대와 내각이 출범 100여일 만에 국정 혼란에 책임을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촉발된 성난 민심은 72시간 빌레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나듯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시위는 6·10항쟁 21주년인 내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가 반정부 투쟁으로 번지며 격화되고 있어 우려된다.

이런 현실에서 청와대와 내각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촛불문화제와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실토했다.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쇄신의 폭과 시기다. 장관이나 수석비서관 몇 명을 교체한다고 해서 수습될 상황은 아니다.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여권 핵심부에선 권력투쟁 양상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쇄신이 형식에 그쳐서는 파국을 부를 수밖에 없다.